

이덕일의 ‘역사의 창’



독도야 간밤에 잘 잤느냐?

평창 패럴림픽에서 한반도기의 독도 표기에 대한 이견으로 남북 공동 입장(入場)이 무산되었다. 남한은 독도가 삭제된 한반도기를 고집한 반면 북한은 독도 삭제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독도는 남한 영토 내에 있으니 북한에 명분에서 크게 밀린 셈이다.

한반도기는 1991년 일본 자바현에서 개최된 세계 탁구선수권 대회 등에서 남북 단일팀의 단기(團旗)로 공식 사용되었다. 당시 남북 올림픽위원회는 ‘제주도’를 상징적으로 그리고, ‘독도, 마라도’ 등은 생략하기로 했다. 그러나 때에 따라서 독도를 그린 한반도기도 사용했다. 한반도기에 독도를 표기하든 말든 남북한의 자유이기 때문이다.

IOC(국제올림픽위원회)에서 권고했다고 하지만 그 어떤 국제기구도 헌법상 강역 삭제를 권고할 자격은 없다. 더구나 그런 권고 뒤엔 일본 측의 작용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더더욱 문제다. ‘정치적 표현 금지’ 운운하지만 언제부터 헌법상의 영토가 ‘정치적 표현’으로 전락했나? 한국 측 관계자들이 IOC를 설득했다는 말

도 들어보지 못했다.

미국 성조기의 별은 50개의 주를 나타낸다. 이중 미국 남부의 텍사스·뉴멕시코·콜로라도·애리조나주 등은 멕시코 강역이었다. 미국과 멕시코는 이를 두고 전쟁을 벌였고 미국이 승리하면서 1848년 ‘과달루페 이달고 조약’으로 미국령이 되었다. 멕시코가 이때의 패전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성조기에 별 몇 개를 빼라고 요구하면 IOC는 미국에 빼라고 권고할 수 있을까? 너무 명확한 문제를 정치적 문제로 변질시킨 것은 일본인데, 대한민국이 꿀 먹은 ○○○가 된 것이다.

지난 3월 21일 한중일 교육장관 회의 때 김상곤 교육부 장관이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기술한 일본 고교 학습지도 요령 개정안의 수정을 일본 측이 촉구했다고 교육부에서 전했다. 그런데 ‘비공개’ 회담에서 합의했다는 것이다.

2008년부터 2015년까지 동북아역사재단은 국고 47억 원을 들어 ‘동북아역사지도’를 제작했다. ‘한국고대사학회’ 등이 주축이 되었는데, 정작 ‘지도 사업’인데 지리학자는 형식상 한 명만 들어가고 60

여 명 이상의 역사학자들이 만들었다. 그런데 독도를 모두 삭제했다.

이에 대한 물의가 일어 2015년 국회 동북아역사왜곡특위에서 문제를 제기했고, 동북아역사재단은 5개월의 수정 기간을 주면서 수정을 요구했다. 당시 김호섭 재단이사장은 지도 제작진에게 ‘독도를 반드시 그려 오라’고 특별히 당부했거나 끝내 그려오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지도의 문제점은 독도뿐만 아니라 한사군을 한반도 북부로 그려 북한 강역을 모두 중국에 넘겨주었고, ‘고려사’ ‘조선왕조실록’ 등에 두만강 북쪽 700리 공험진이나 끝내 그려오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이 지도의 문제점은 독도뿐만 아니라 한사군을 한반도 북부로 그려 북한 강역을 모두 중국에 넘겨주었고, ‘고려사’ ‘조선왕조실록’ 등에 두만강 북쪽 700리 공험진이나 끝내 그려오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이 지도의 문제점은 독도뿐만 아니라 한사군을 한반도 북부로 그려 북한 강역을 모두 중국에 넘겨주었고, ‘고려사’ ‘조선왕조실록’ 등에 두만강 북쪽 700리 공험진이나 끝내 그려오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이 지도가 공개되면서 그간 현란한 말로 국민을 속여 왔던 식민사학의 실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지도는 말과 달리 그림으로 표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독립전쟁사는 한 장도 없고 ‘식민지 시기 행정구역’은 13장이나 그려 놓았다. 이 때문에 전 정권에서 폐기 조치된 ‘동북아역사지도’인데, 현 정권의 동북아역사재단이

다시 제작하겠다고 선언해 ‘동북아역사재단 해체 범시민연대’가 결성되는 등 시민들의 반발이 일고 있다.

제작하려면 독도는 눈속임용으로 그려 넣겠지만 이 지도는 고쳐서 쓸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이 지도를 비판했던 학자들과 공청회도 생각하고 밀실에서 제작을 결정할 것도 이 때문이다. 현 정권이 강조하는 국민 소통과도 거리가 멀다.

나는 한 정권의 미래를 예측하는 것대로 늘 역사 문제를 본다. 너무 진일적이었던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몰락은 예견된 것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1절 경축사에서 독립운동가를 높이겠다고 선언하고 3·1절 경축사에서는 일본의 독도 인식을 꾸짖었다. 올바른 역사 인식이다.

그러나 대통령이 전명한 역사관과 ‘동북아역사지도’ 재제작 선언 등은 정확히 반대편에서 있다. 대통령이 전명한 역사관과 역사를 다루는 국가 기관이 걷는 방향이 계속 다를 경우 대통령이 전명한 역사의 진정성에 의문이 드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장)

의료칼럼

춘곤증



안 규상 불한의원 원장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겨울철 추운 실외에 있다가 따뜻한 실내에 들어오면 감각이 둔해지고 나른해지는 것과 같다. 겨울에 얼었던 땅이 봄이 되면서 녹는 것처럼 우리 몸도 겨울에는 움츠렸다가 봄이 되면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그 과정에서 환경 변화에 적절하게 적응하지 못하면 ‘춘곤증’이 나타난다.

그 원인을 동의보감에서는 봄에 특히 풍(風)이나 간병(肝病)이 발생하기 쉽다고 하였는데, 한의학적인 관점으로 보면 간은 피로와도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장부라 본다. 즉,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환경 변화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것은 ‘한의학적 감기능’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또 겨울 동안 운동이 부족한 사람이나 피로가 쌓인 사람일수록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는데 경향이 있다.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되는 춘곤증 극복 방법을 알아보자. 가장 먼저 실천할 것은 역시 적당한 운동을 하는 것이다. 피곤하다고 움직이지 않으면 오히려 춘곤증이 더 심해질 수 있다. 실내에 있을 때에는 스트레칭을 해서 근육을 풀어주고 하

루에 30분~1시간 정도,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는 산책하듯이 가볍게 걷는 것이 좋다. 하지만 운동을 하지 않다가 갑자기 움직이게 되면 관절이나 근육에 쉽게 피로가 쌓일 수 있으니 느긋한 마음으로 천천히 해야한다. 자신의 움직임을 충분히 제어하고 관찰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하는 운동이 가장 효과적이다.

또한 충분한 수면은 필수이다. 수면 시간은 하루 7~8시간 정도가 적당하고, 무엇보다 숙면을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숙면을 취하지 못한다면 커피 등 카페인에 들어간 음료는 피하고, 졸리기 전까지는 침대에 눕지 않는 것이 좋다. 낮잠은 숙면을 방해할 수 있으니 가급적이면 하지 않는 것이 좋지만 너무 피곤해서 일상생활이 힘들다면 15분 정도 책상에 엎드려거나 의자에 편안하게 앉아서 눈을 붙이는 것이 좋다.

제철 음식은 신선대사에 도움이 되는 물론 생활에 만족감을 주는 활력소라고 할 수 있다. 봄철에는 신선대사가 활발해져 비타민 소모량이 늘어난다. 특히 비타민 B1과 C가 부족하기 쉬운데, 비타민 B1이 풍부한 돼지고기나 콩, 잡곡밥과 비

타민 C가 풍부한 과일과 채소를 많이 섭취하는 것이 좋다. 봄나물은 봄을 닮아 강한 생기를 지니고 있다. 냉이, 돌나물, 두릅, 씀바귀 등은 약간 쓰고 매운맛을 가지고 있어 봄이 되면 몸속의 독소를 빼내어 나열을 내리고 머리를 맑게 하는 효능이 있다. 그리고 매운맛은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충분한 휴식과 영양 섭취, 운동 등의 노력을 하였는데도 4주 이상 피곤하다면 간염이나 갑상선 질환 등이 원인이거나 허증(기운과 영양분이 부족한 상태)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한의원을 찾아 진료를 통해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한다.

봄은 계절의 시작이다. 무언가를 시작한다는 것은 본래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법이다. 이미 우리 몸은 새로운 봄을 맞아 움직이기 시작했다. 새로운 겨울이 따뜻한 봄을 맞아 우리 몸도 시동을 걸고 있는 것이다. 춘곤증을 단지 짜증나는 증상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아, 우리 몸이 지금 봄에 적응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내 몸을 챙기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기 고

영산강 선상에서의 다짐



김 종 일 광주전남연구원 사회환경연구실장

남도지사에게 영산호 수질 모니터링과 수중 및 부유 쓰레기 수거, 환경 탐사 및 체험 교육 지원 등을 위해 영산강 환경선박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전남도는 그해 11월 영산강에 환경 정화 선박을 들여왔다. 건의가 곧바로 수용된 것이다. 전남 동부 연안에서 활동하던 57톤급 어장 정화 선박을 개조한 것이었다. 전남도는 이 환경정화선을 이용해 작년까지만 1만톤이 넘는 수중 및 부유 쓰레기를 수거했다.

그러나 바다에서 운항했던 선박이었기 때문에 수심이 얇은 수역이나 지류에서 정화 활동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선박이 최초 1994년에 건조되어 유지 관리 비용이 늘어나고 안전 사고 우려까지 있어 교체 필요성이 커졌다. 이에 전남도가 중앙 부처에 정화 선박 건조의 필요성과 국비 지원 당위성을 제기해 2016년 국비 30억 원을 확보하고 도비를 포함해 모두 56억 원을 들여 환경 정화 선박을 건조한 것이다.

선박 크기는 87톤급이며 쓰레기 수거용 크레인과 녹조 제거 설비, 바지선 등

부대 시설도 갖추었다. 뿐만 아니라 수은, 탁도, 용존산소(DO), 화학적 산소 요구량(COD), 전기 전도도, 수소이온농도(pH) 등 주요 수질 항목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와 퇴적 오니를 들어 올릴 수 있는 체니기를 갖추고 있다.

선박 이름은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명명한 것이다. 기존 선박은 하구둑에서 몽탄대교까지 23.5km 구간에서 정화 활동을 벌였으나, 영산강 클린호는 죽산보가 위치한 48.6km 구간까지 운항해 보다 광범위한 수역에서 쓰레기 수거, 녹조 제거 등의 활동이 가능하게 되었다.

1981년 하구둑에 막혀 호수로 변해버린 영산호. 그동안 지역에서 제시된 수질 개선 과제들이 예산 부족, 관계 부서간 이견 등으로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 다행히 작년부터 “영산강 하구 수질 및 수생태계 개선”에 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어 유역민의 기대가 크다. 지난 2007년 “영산호 수질 개선 타당성 조사 연구”에서 처음 제기된 해수 유동 방안에 대해서 다양한 시나리오별로 해수 유동의 영향과

수질 및 생태 복원 효과를 예측하는 연구이다.

해수 유동이 가시화되기까지는 선박 건조보다 지난한 기간이 소요될 것이다. 해수 유동이 육상과 해상에 미치는 영향을 기술적·경제적·환경적 측면에서 검토하고, 이에 관계자의 상충되는 의견을 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중장기 로드맵을 작성해 조사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연구 성과의 논의 및 의사 결정을 위해 영산강과 연안을 이용·관리하는 이해 관계자, 민간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유역 통합 거버넌스 구축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마침 문재인 정부 국정 과제에 물관리 일원화와 유역 거버넌스 구축이 포함되어 정책 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우호적이다.

13년 전 영산강 선박 탐사 참석자들이 꿈꾸어 온 클린 영산강 실현을 위해 무리하게 서두르지 않되, 호기(好機)를 잡는 지혜가 필요하다. 물 들어 올 때 배 띄울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社 說

‘5월 정신’은 시장 후보 검증의 중요한 잣대다

6·13 지방선거 공천 경쟁이 한창인 가운데 광주시장 후보의 경우 ‘5월 정신’을 검증의 주요 잣대로 삼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촛불 혁명’ 이후 첫 선거인 데다 5·18 진상 규명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만큼 이에 부합하는 정체성을 지닌 후보를 뽑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최근 지역 대학가에는 “과거 군부 정권에 부여했던 정치인들을 퇴출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대자보가 나붙기도 했다. ‘5월 정신’이 지방선거의 새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5·18 단체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30여 명으로 구성된 ‘2018 광주 지방선거 시민검증단 추진위원회’는 그해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18 정신은 광주 지역 지방선거 출마자들의 기본 자질을 검증하는 첫 잣대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시장의 제1 요건은 헌법 정신이자 광주 정신인 5·18 정신”이라고 강조한 이들은 후보

검증 절차와 기준은 시민사회가 주도 하되, 각 정당은 시민의 뜻에 적합한 도덕성을 갖춘 후보자들을 공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민검증단은 광주 지역 후보들을 대상으로 공개 질의와 토론회 등을 통해 후보를 검증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검증단의 한 관계자는 “5·18 이후 어떻게 살았는지도 중요 검증 항목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민사회의 이러한 움직임에 6월 지방선거가 촛불 민심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 치러지는 전국 선거인 데다 5·18의 헌법 전문 수록과 진상 규명 특별법 제정 등으로 어느 때보다 5월 정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 밑바탕이 되고 있다. 미완의 5·18 과제 해결과 올바른 정신 계승을 위해서도 광주의 정체성에 걸맞은 지역 일꾼을 뽑는 것은 당연하다. 후보들도 이러한 검증 과정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유권자에 대한 도리일 것이다.

문화수도 광주만의 독특한 건축을 보고 싶다

최근 문화수도 광주를 대표할 수 있는 건축물을 장려하고 지원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신규 건축물에 대한 심의 기준을 신설하고, 공공 건축물의 경우 디자인이나 주변과의 조화 등을 공개적으로 평가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현재 건축위원회 심의와 관련 광주시는 별다른 기준 없이 건축법시행령, 국토교통부 건축위원회 심의 기준 등 상위 법률과 중앙정부 부처의 기준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내용도 총칙과 위원회 운영 등만을 간략하게 규정하고 건축위원들의 개인적 판단에 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국내의 문화도시들이 건축물을 공적 지원으로 인식해 설계에서부터 건축 및 준공 이후까지 컨트롤하고 있는 것과 대조된다. 서울시의 경우 2008년부터 ‘서울시 건축물 심의 기준’을 통해 건축물의 규모와 주변 환경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유감스럽게도 우리 광주의 경우 시대의 흐름과 거리가 멀다. 시 건축위원들에게 건축물에 대한 심의를 맡기기도 하니 민간 건축물 건축의 경우 도시의 정체성이나 이미지에 걸맞은 미적 요소 등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근래 예산 290억 원을 투입해 광주공원 옆 주차장에 조성 중인 융복합센터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플랫폼(AMT)’ 역시 자칫 색깔 없는 건물이 되고 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사실 광주는 문화수도를 표방하고 있지만 도시의 이미지에 부합하는 매력적인 건축물이 드물다. 아름다운 건축물은 도시의 랜드마크이자 관광객들을 불러 모으는 자원인 만큼 시는 건축 설계 공개경쟁, 시민 평가, 디자인 요소 등을 체계적으로 반영하는 건축물 심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토지 소유주나 건축주들을 대상으로 건물이 개인 자산이 아닌 공공재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노력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바야흐로 정치의 계절이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가 아니라라도 지역에서 나름 영향력을 지닌 인사들의 진로에 지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들 인사의 참여가 후보자의 역량 강화, 나아가 선거의 승패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캠프마다 인사 영입 경쟁에 나서면서 몸값이 오르고, 이들의 행보와 언행이 여기저기서 이슈로 부상하거나 돌발 변수가 돼 회자되고 있다.

춘추 전국 시대에는 유세객이 있었다. 전국 시대 막바지, 지락을 갖춘 그들은 국가의 명운을 걸고 국경을 넘나들며 말로써

유세객(遊說客)

국가를 흥하게 하고 또는 망하게 했다. 함중연원으로 유명한 소진과 정의, 진나라의 통일 기반을 닦았던 상앙과 범수 등은 그중에서도 두드러진 인사들이다. 해당 국가의 지정학적 위치와 국력, 국가 간 역학 관계 및 미래 구도, 내부 권력총과의 마찰 등을 감안하면서 군주를 설득하는 것은 물론 쉬운 일이 아니었다. 문전박대는 예사였고, 문턱을 넘어 몇 년이고 기다리며 편지로 설득해도 마주하기 어려웠다. 설사 만났더라도 제후의 기존 사고방식을 바꿔 자신의 그림을 받아들여도록 한 인사는

손으로 꼽을 정도다. 사마천 사기열전의 세 번째 이야기 ‘노장신한열전(老莊申韓列傳)’에 등장하는 한비자는 세난(說難)이라는 글을 지었다. 그 역시도 성공하지 못했지만, 그의 저서만은 많은 공감을 얻었다. 미자하라는 실존 인물을 예로 든 한비자는 “신하가 군주의 총애를 받을 때는 그의 지혜 또한 군주의 마음에 들 것이지만, 총애가 사라지고 나면 뛰어난 지혜마저도 벌을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군주의 총애를 받고 그것을 유지하는 것에 온 힘을 다해야 입신양명을 보장받는다는 의미다.

지방 분권 개헌이 논의되고 있는 시점에서의 이번 지방선거의 중요함은 몇 번을 강조해도 부족하다. 후보자들의 캠프에서 불철주야 일하고 있는 지역 인사들이 후보자의 총애와 자신의 입신양명만 바라보지 말고, 광주·전남과 지역민을 가장 우선시했으면 한다. 올바른 생각을 세상에 관철시키는 것만으로도 만족할 줄 아는 진정한 유세객이 지역에서 인정을 받고, 그로 인해 선거가 이 지역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윤현석 정치부 부장chadol@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5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8005)	220-0541 (FAX 222-0195)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7-9600)	업 무 국 220-0551 (FAX 227-9600)	220-0551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문화미디어부 220-0664 (FAX 220-0697)	사 회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사 회 부 220-0652	사 진 부 220-0693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